

우리 나라의 돼지콜레라 발생 역사와 근절정책 평가

1. 머리말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 산업 미래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방역당국과 양돈인 모두가 돼지콜레라를 이 땅에서 근절해 보고자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있다. '99년 초 75% 안팎이던 백신접종률이 '99년 말에는 95%로 급상승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와 노력이 양돈현장에서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박멸계획이 1996년 4월에 성안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으나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았으며,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으나 방역주체가 뚜렷하지 않았고 농장 자율방역에 호소하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여 지지부진하였었다.

일본의 돼지콜레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우리의 돈육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1997~8년에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서 돈육수출 없이 우리 양돈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도 피부에 와 닿게 되었다. 우리 정부당국과 양돈업계도 1998년 말에 들어와서야 제법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내놓게 되었으며 양돈인들의 협조도 두드러지게 달라지게 되었다.

돼지콜레라가 우리 나라에서 발생 확인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 십 년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100% 백신접종을 목표로 과감하게 추진한 2년여의 노력만으로 과연 돼지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김은 어쩌면 당



김 봉 환 교수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백신접종률이 70% 수준에 머물던 것을 단기간 내에 95% 이상을 달성한 저력으로 필요 불가결한 조치들을 신중하게 계속하면 우리도 돼지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돼지콜레라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돼지콜레라 발생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근절정책이 과연 성공리에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가 지향할 바를 더욱 다지 고자 한다.

2. 우리 나라의 돼지 콜레라 발생사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 첫 발생은 조선농회(朝鮮農會)가 발행한 조선농업발달사(朝鮮農業發達史)에 1908년에 66두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190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였으며, 1917년에 이르러서야 돼지 콜레라의 발생지역이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농업발달사에 의하면 함경남북도, 황해도, 평안남북

도 등 압록강을 기점으로 한 중국대륙과 인접한 국경지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1917년의 발생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그 이전의 발생도 중국과 인접한 북방의 각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기록상으로는 1907년 이전에는 발생한 증거는 없지만 그

해방 후 미군 군정시대인 1947년 10월에 서울 서대문의 불이농원(不二農園)에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확인되어 남한지방에서는 첫 발생 예로 기록되었다. 서울을 휩쓴 돼지콜레라는 계속 만연되어 1948년 이른 봄 부터는 강원, 중남, 중북, 전북, 경북 등으로 전파하여 근세 가축전염병 유행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하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실정과 행정기능을 감안하면 그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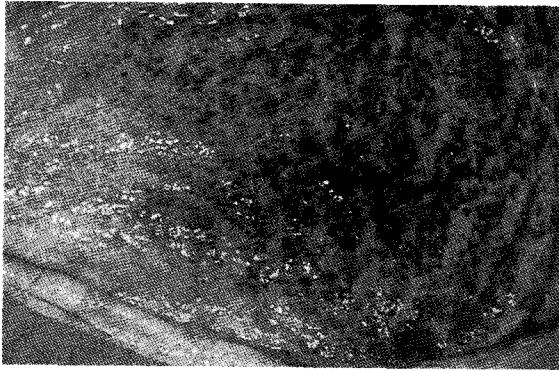
돼지콜레라의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1920년까지는 연간 10두에서 229두, 1920~30년까지는 88두에서 660두, 1931년부터 1940년까지는 11두에서 658두로 주로 북한의 함경남북도 및 평안남북도에 한정된

발생이었을 뿐 1946년까지는 남한지역에서는 발생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 후 미군 군정시대인 1947년 10월에 서울 서대문의 불이농원(不二農園)에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확인되어 남한지방에서는 첫 발생 예로 기록되었다. 그 당시에 이 병의 진단결과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으며 그런 와중에 서울근교의 제기동, 청량리, 왕십리 등으로 확산되어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다.

서울을 휩쓴 돼지콜레라는 계속 만연되어 1948년 이른 봄 부터는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등으로 전파하여 근세 가축전염병 유행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하게 되었다. 1948년의 행정통계에 의하면 돼지콜레라 발생두수는 118,000여 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당시 우리 나라 돼지 사육두수의 약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을 정도이었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대유행에 따라 1948년 가축전염병 예방령을 발동함과 아울러 폴마린 불활화 돼지콜레라백신(Formalin Inactivated Hog Cholera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이 없는가?



▲<돼지콜레라 소견> 방광 점막의 출혈



▲<돼지콜레라 소견> 대장 점막의 버튼상 괴양

Vaccine)으로 예방을 실시하였으나 당시의 백신 공급여건이 여의치 않아 야외 감염원의 장기로도 불활화백신을 조제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었다. 1952년에는 가토화 약독바이러스 생독백신(ROVAC)이 개발되어 면역효과도 높아졌으며 다량생산도 가능하여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돼지콜레라 방역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7년 조직배양순화바이러스 생독백신(LOM vaccine)의 개발과 더불어 백신의 공급이 더욱 확대되어 50두 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국가방역을, 50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으로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1947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돼지 콜레라의 발생은 계속되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55년 폭발적인 발생(전국적으로 13,545두)을 제외하고는 종전 후부터 1980년에 이르는 동안 1,000두 내외의 일정수준에서 발생이 매년 계속되었다. 1982년과 1983년에는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 이환돈의 살처분 보상정책(깃가의 50%)을 비로소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철저한 백신접종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발생이 주춤하였으나 1987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9년에는 94건 10,107두가 발생하여 1955년대 발생 이후 최고의 발생을 기록하였다. 1988년부터는 살처분 보상금을 종래의 시가평가액의 50%에서 80%로 인상하고 1989년부터 30두 미만의 사육농가에만 국가방역 즉, 살처분보상제를 실시하고 30두 이상의 농장에는 무보상

살처분제로 개정하여 강력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1997년에 이르기까지 연간 1,000여 두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에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5개년 계획으로 돼지콜레라의 근절정책을 수립하여 대대적인 백신접종 강화로 발생을 차단하고 청정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가축방역사상 최초로 생산자와 방역당국이 혼연일체가 되어 질병 근절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 근절정책은 과연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가?

'96년에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당시 농수산부 고위층과 양돈업계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었고 수의계(獸醫界)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 가축질병 근절대책안을 보고할 때에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과 관련업계의 시큰둥한 태도에서 당시 수의과학연구소 관계관과 필자는 큰 실망을 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대만에서는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었습니까? 그리고 대만은 세계에서 돈육을 가장 많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돼지콜레라 근절과 돈육수출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가 하면 일본에서도 아직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돈육수출과 돼지콜레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양돈업계 일부에서 있었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만의 구제역 사건, 네델란드의 돼지콜레라 사건 등이 1997년에 터져 나오자 정부당국과 식견 있는 양돈인들이 정신을 가다듬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강 건너 불이 소규모 양돈인에게는 심각하게 와 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일본이 우리 나라 돈육의 수입조건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주변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처리된 돈육이 아니어야 하며 반드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돈의 돈육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통보해온 후부터 수출양돈업계를 중심으로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우리 정부당국과 양돈업계도 1998년 말에 들어와서야 제법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내놓게 되었다. '99년 초 75% 안팎이던 백신접종률이 '99년 말에는 95%로 급상승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와 노력이 양돈연장에서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확인한 백신접종 양계영성률이 95%를 상회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 근절명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작하였다. 이제는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과잉공급으로 돈육의 가격하락, 이에 따른 투매현상과 소비자의 국내산 돈육기피? 현상까지 겹치면 양돈산업이 붕괴의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구제역의 발생으로 앞당겨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일본 수출은 커녕 값싼 돈육이 중국 등에서 밀려올 것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은 우리 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돼지가 백신접종되어 면역이 형성되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최소 1년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으면 우리 나라 돼지에는 야외 바이러스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어, 백신접종을 중단할 수 있고 백신접종 중단 후 6개월 이상 발생이 없으면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종식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100% 백신접종 및 면역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4060 작전이 나왔고 백신 불성실농가 과태료처분, 백신 접종강화를 위한 지역담당제가 추진되었고 경기 용인지역 등 과거 2년간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부족하여 양돈관계인과 단체가 주축이 되어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하여 백신접종을 독려하였으며 농장체혈 검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는가?

사를 강화하여 면역형성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 전염병박멸계획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으나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았으며,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으나 방역주체가 뚜렷하지 않았고 농장 자율방역에 호소하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여 지지부진 하였었다.

일본의 돼지콜레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우리의 돈육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1997~8년에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서 돈육수출 없이 우리 양돈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도 피부에 와 닿게 되었다.

우리 정부당국과 양돈업계도 1998년 말에 들어와서야 제법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내놓게 되었

다. '99년 초 75% 안팎이던 백신접종률이 '99년 말에는 95%로 급상승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와 노력이 양돈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확인한 백신접종 항체형성률이 95%를 상회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 근절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는 3월 1일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전면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백신접종을 중단한 상태에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콜레라 발생국가 또는 지역에서 철저히 백신접종으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병돈군에 대해서는 살처분 정책을 강력히 수행하여 병원소(病原巢)를 스탬핑 아웃

(stamping out)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중단이 쉽지 않다.

백신접종 중단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백신의 접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 나라 전역에서 최소 1년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행히 99년 8월에 경기도 용인지방에서 발생한 이후 발생이 없지만 이후부터 어느 한 곳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돼지콜레라의 근절을 물 건너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항간에 노출되지 않은 발생예가 있다느니 하는 의문점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유자돈 폐사율이 높거나 위약돈이 문제되는 농장이 노출되어 야외바이러스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이 최소 1년간 일정수준 이상(가능하면 95%) 유지되어 전 양돈농가의 백신접종률 및 항체양성률이 명실공히 완벽



◀1947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계속되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에서 야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표본추출조사에서 우리 나라의 돼지에 백신 바이러스 이외의 다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항원검사는 여러 면에서 중요시되며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가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일정두수의 표본 채취를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돼지의 이동통제 특히, 광역지자체간의 이동통제와 떨어돼지의 무분별한 이동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축장의 위생강화로 위생적 돈육 처리 가공은 물론 도축장을 통한 질병의 전파차단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공항과 항만을 통한 돼지고기의 밀수 또는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해외 특히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 국가 및 북한으로부터 돼지콜

레라 바이러스의 유입이 차단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 중단을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백신접종 중단을 위한 전제조건과 이행여부와 백신접종 후에 취할 대책 등에 대한 평가가 방역당국, 관련단체, 양돈인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 같은 목소리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 중단을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백신접종 중단을 위한 전제조건
의 이행여부와 백신접종 후에 취할 대책 등
에 대한 평가가 방역당국, 관련단체, 양돈 인
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 같은 목소리로 백신
접종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후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백신접종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후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4. 멧는 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한

다고 했는데도 여기저기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바 있는 지난 수 년간의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전업규모의 양돈인들은 백신접종 중단 후에 혹시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만약의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하고 만의 하나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대책이 수립되어 양돈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백신접종 중단을 유도할 수 있다. 만약의 사태 발생시 살처분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새로 양돈을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양돈인 스스로도 양돈업은 스스로 지킨다는 신념으로 자조금 제도의 도입 등 자립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돼지콜레라 근절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양돈업은 다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만큼 돼지콜레라에 대한 강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돼지콜레라의 근절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이것 자체가 양돈의 생산성 또는 돈육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돼지콜레라 등 전염성 질병은 돼지의 이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이러한 돼지 질병의 방역은 돼지의 이동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해서 돼지의 흐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생상태가 좋은 종돈장의 건강한 돼지만이 비육농장으로 이동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값싼 소위 떨어돼지는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돼지질병의 전파 주범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않는 양돈인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근절의 여세를 몰아 일부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오제스키병의 근절을 추진하고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사병과 호흡기 복합증후군에 대한 방제대책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라인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돈육의 안전성 확보 및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축장 위생의 강화가 시급하다. 권역별로 현대화된 도축시설에서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도축 및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돈육의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모든 포크체인현장(from stable to table)에 적용되어야 한다.

일본이 계획대로 작년 10월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단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6개월 후인 2001년 4월, 또는 2001년 10월에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언을 하면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돼지에 관련되는 OIE A급 질병이 전혀 발생하

지 않는 나라가 된다. 우리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최대 불행한 시나리오인 돼지콜레라 근절 실패에다 구제역 재유입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양돈과 젓소와 한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축산업의 기반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값싼 중국의 돈육과 우육의 수입을 막을 방패막이가 허물어져 물밀 듯이 몰려올 중국의 돈육과 우육으로 우리 축산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게 보임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게끔 방역당국, 관련단체, 학계는 물론 특히 우리 양돈인들이 한 목소리로 돼지콜레라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양돈 관련단체에서는 양돈인들의 자활의지를 고양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돼지콜레라를 성공리에 근절함과 동시에 구제역 청정화를 선언하고 돼지 오제스키병도 없애는 노력을 계속하여, 우리 양돈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시대 양돈인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기필코 이 과업을 이룩합시다. **양돈**